"자연재난에 강한 전북실현" 성큼

위험지역정비사업 5개분야에 1360억원 투입
산사태·붕괴 등 각종 위험요인 사전제거 총력

전북도는 집중호우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재해예방사업을 펼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붕괴, 유실 등으로부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전라북도의 의지가 담겨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면은 상습침수·유실위험지역 등의 위험요인을 정비하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5개지구 530억원, 산사태·붕괴 우려지역 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하는 급경사지 정비사업 17개지구 173억원, 노후화로 재해위험이 높은 저수지를 보수·보강하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1개지구 97억원, 소하천의 범람 및 생태계보전을 위한 소하천정비사업 57개지구 469억원, 도심지 저지대 주민들의 상습침수피해 해소를 위해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개소 91억원 등 2018년 재해예방사업 5개분야 121개지구에 1,360억원을 투입, 재해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 관계자는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속도감 있는 재해예방사업의 조기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재해예방사업을 2월말까지 전체사업지구의 90%이상 발주와 여름철 우기 전 6월말까지 60%이상 주요공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현웅 도민안전실장을 단장으로 2017년 12월부터 28개반 155명(도 2개반 12명, 시군 26개반 143명)을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

도 이현웅 도민안전실장은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새로운 재해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후복구가 아닌 사전예방 중심의 사업으로 자연재난에 강한 전북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올해도 하나님의 사랑 가득" 4일 전주라마다호텔에서는 전북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송하진 도지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독교 신년하례회행사를 가졌다.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어디에 썼나

옷값·기치료 등 사적 사용
검찰, 뇌물 등 혐의 추가 기소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4일 추가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을 받아 삼성동 사저관리비용, 기치료·운동치료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국고손실·횡령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문고리3인방'으로 불렸던 최측근인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안봉근 전 비서관을 통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매월 현금 5000만원씩 총 6억원을 받았다.

이어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배로 증액된 매월 1억 원씩 총 8억원을 받아 챙겼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자금을 계속 지원해 달라'고 직접 요구해 매달 1억 ~2억원씩 총 19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수동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게 아니었다는 근거로 보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8월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발생하자 상납을 중단시킨 뒤, 한 달만인 같은 해 9월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받은 돈은 총 35억원에 달한다.

건네받은 자금의 관리는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맡았다. 이 전 비서관은 공식 특수활동비와 별도로 총무비서관실 내 자신만이 사용하는 금고에 돈을 넣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

사용처를 보면 35억원 중 2016년 9월에 받은 2억원은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2억원은 이재만 비서관 등을 거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33억원 중 약 15억원은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순실씨 등이 사용한 차명폰 요금, 삼성동 사저관리비용, 기치료·운동치료, 문고리3인방 3인의 관리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됐다.

또 약 18억원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대통령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중 일부가 최순실씨에게 전달되어 의상실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의 존재에 대해 청와대 내에서 박 전 대통령과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비서관만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없이 세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이 돈을 사용한 사실도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은 상납 받은 자금으로 최씨와 연락을 위한 차명폰 요금, 기치료·운동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관리비, 사저관리인 급여, 사저수리비 등 개인적 용도에 3억6500만원, '문고리3인방' 관리비용으로 9억7600만원을 사용했다. 또 자신의 전용 의상실 운영에 들어간 돈 6억9100만원 중 일부를 특활비로 충당했다.

특히 검찰은 사용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급된 상납금 액수가 정확히 최순실씨의 메모에 기록된 사실을 파악했다.

최씨는 자신의 수첩에 ▲J(정호성) 13년 3000만원, 14년 5000만 원, 15년 5000만 원(합계 1억3000만원) ▲Lee(이재만) '〃' 정호성과 같다는 의미에서 ▲An(안봉근) 13년 3000만원, 14년 5000만 원, 15년 3000만 원(합계 1억 1000만 원)이라고 적었다. 이들 세 명이 받아간 돈과 일치하는 액수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국정원 자금 상납금의 관리, 사용에 일정부분 어떤 형식으로든 최씨가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1억5000만원을 건넸고,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는데도 5억원을 사용했다. 다만 검찰은 총선 여론조사에 사용된 5억원의 경우 추가로 조사할 부분이 있어 이번 추가기소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상납받은 돈이 전부 현금이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조사를 수차례 거부하는 현실적인 장애가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수집할 수 있는 관련자들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확인된 사실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돈에 대해 기본적인 관리를 맡았던 사람은 이 전 비서관이다"라며 "사생활 관련한 관리를 맡았던 안봉근, 정호성, 이영선, 윤전추 등 핵심 관련자들 30여명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도, 건강증진분야 민간사회단체 육성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11일까지 신청접수 가능
3~4개 단체 선정 예정

전북도는 4일 건강증진분야 민간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도정참여 활성화를 통한 도정발전 및 도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수준을 향상시키고자 '2018년 건강증진분야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자격은 건강증진분야에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 민간사회단체로, 개인 및 친목단체와 타 기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유사, 중복 사업,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신청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10%미만 사업은 제외 대상이다.

신청은 1월 11일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단체 등록여부 확인서류 1부, 회칙 및 정관서류 1부 등을 구비하여 전라북도 건강안전과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

공모액은 총 2800만원으로 3~4개 단체 선정 예정이며, 신청접수된 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구체성 등에 대해 1월중 서면 및 현지 점검 등 검토 후, 2월중 전라북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심의 선정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을 참고하거나, 전라북도 건강안전과(280-4696)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文, 10일 신년기자회견서 새해국정구상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청와대에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취임 100일 기념 회견 후 이번이 두 번째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 25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약 80분 동안 신년 기자회견을 갖는다. 문 대통령이 먼저 새해 국정운영 기조를 설명하는 신년사를 발표한 뒤 문답이 이어진다.

신년 기자회견은 지난해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출입기자들이 정치·외교·안보·남북관계·경제분야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면 문 대통령이 즉석에서 답변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달리 문 대통령이 질문자를 직접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기자회견 때는 사회를 맡았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질문자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한 남북관계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과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를 풀기 위한 외교적 해법 등 쏟아지는 현안 질문에 어떤 답변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뉴시스

1월 병사 봉급 인상분 19일 소급 지급… 내달부터 정상지급

국방부는 새해 1월 병사 봉급은 2017년과 동일하게 우선 지급하고 오는 19일 인상분을 소급해서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매년 병 봉급 인상분은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이후 지급토록 돼 있으며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법령 개정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에 지급되는 1월분 병 봉급은 지난해와 동일한 금액으로 우선 지급하고, 인상분은 관련법 개정 이후 오는 19일에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2월부터는 인상된 금액으로 정상 지급된다.

국방부는 1월 인상분을 받지 못하고 전역한 인원에 대해서도 전역 후에도 봉급 통장을 유지, 소급 정산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병장 월급은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상병 월급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00원, 일병 월급은 17만6400원에서 33만1300원, 이병 월급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뉴시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 2018 나눔캠페인 기부자명단

◆ 군산시 옥산면
- ▷여로마을 200,000원
- ▷대려마을 150,000원
- ▷내류마을 100,000원
- ▷옥교마을 100,000원
- ▷신성마을 130,000원
- ▷망동마을 200,000원
- ▷구성마을 130,000원

** 계 1,010,000원

◆ 장수군 계남면
- ▷궁평마을 224,000원
- ▷고정마을 208,000원
- ▷양신마을 138,000원
- ▷화산마을 121,000원
- ▷괴목마을 44,000원
- ▷요전마을 34,000원

** 계 769,000원

◆ 고창군 부안면
- ▷종산마을 65,000원
- ▷검곡마을 160,000원

** 계 225,000원

◆ 부안군 백산면
- ▷원천리 원천1마을 100,000원
- ▷하청리 괴정마을 90,000원
- ▷덕천리 신기마을 320,000원

** 계 510,000원